

꿈에 그친 강원도에서 실현되는

제21회 강원도 골프선수권대회

2015. 8. 24(월) ▶ 25(화)

참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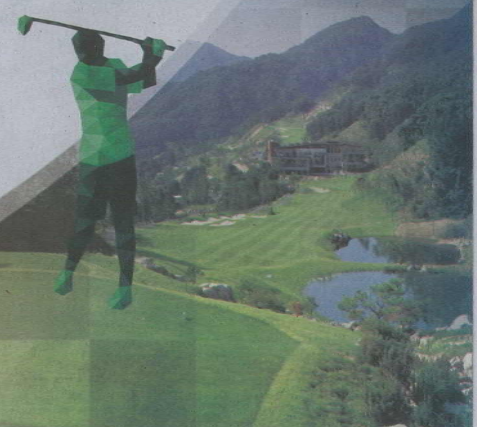
- 대회일자 2015년 8월 24~25일
(24~25일 : 학생 선수권대회, 25일 : 일반부 남·여)
- 대회장소 홍천군 비관힐스 골프클럽(구. 홍천CC)
- 경기종목 학생부(초·중·고, 남·여), 일반부(남·여)
- 시상금 남자부 - 우승 : 250만원, 준우승 : 150만원, 3위 : 100만원
여자부 - 우승 : 100만원, 준우승 : 50만원, 3위 : 30만원
- 경기방식 스트로크 플레이
- 신청마감 2015년 8월 14일

문의 및 접수 전화 및 팩스 접수입니다.
강원일보사 전략기획본부 T. 033) 258-1250~3 F. 258-1255
강원도골프협회 T. 033) 646-8300 F. 646-8301
* 참가신청서는 도내 시·군 골프협회, 골프용품점, 도내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비치

주최 | 강원일보사 주관 | 강원도골프협회

후원 | 홍천군 홍천군체육회 하이원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태성종합건설 BEACON HILLS

비관힐스... 풀퍼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청정 골프장



올림픽특구사업 국비 확보 난항

기재부, 내년 예산 248억 미반영 도-문체부, 사업 추가 설명 나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11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

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068억원을 투입해 △강원관광 종합안내시스템 구축(77억원)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92억원) △지역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80억원) △전통 숙박시설 및 기반조성(57억원)

△올림픽트레킹 코스 개발(33억원) △한류 K-컬처 콘텐츠 경쟁력 강화(120억원) △호석문화예술촌 조성(100억원) △올림픽 아트센터 조성(509억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문체부에 내년 사업 예산으로 국비 24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 심의를 통해 도

가 요청한 248억원을 전액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1차 심의에서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 예산 전액이 미반영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분류, 현재 별도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국비 248억원이 확보되면 정해진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248억원을 추가로 투입

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도는 문체부와 함께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을 실시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 예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안 심의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은 올림픽 분위기의 도 지역 확산과 올림픽 개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국비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 올림픽 성공 개최는 물론 올림픽 문화 유산으로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오인

행자부, 최저가 낙찰제 → 적격심사제 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기업의 덤핑 수주와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제조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과 신인

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수준의 제조비용과 품질 보장이 가능하다.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 경쟁 유발을 막고, 물품 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는 기술제안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유찰시에도 공사 예산의 일부(1%)를 보상하도록 했다. 서울/남궁창성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시행하는 건설사들이 부대사업 운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부대사업에 따른 예상 이익을 사전에 확정해 정부 시설 임대료에서 차감받지만 정작 자금 조달이나 운영 단계에서 어려움이 크고 실제 수익도 예상에 못 미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BTL사업 시행 건설사들 '부대사업 리스크'에 울상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시설 사용료) 절감을 목적으로 BTL사업 시행자 선정 때 음식 판매시설이나 아파트 개발과 같은 부대사업을 결들이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대사업을 대거 집어넣는 방식으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전에 예상수익 확정, 임대료 책정 경기 악화로 투자비 못 건지기 일쑤

주무관청은 협상 과정에서 부대사업 총 예상 이익을 현 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시설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시행사는 부대사업 이익을 1000억원 이상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시행사는 이 이익을 260억~270억원으로 각각 예상하고 시설 임대료에서 공제했다.

사전에 부대사업 이익을 확정하다 보니 향후 부대사업 운영 시 수익성이 악화되면 시행자가 전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이후 경기가 나빠져 투자비를 못 건지는 부대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철도 BTL의 경우 대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지어 부대사업을 영위한다. 그런데 선로 위에 있다 보니 일반 상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유권은 정부에 있는 등 임대료 책정도 불리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실시협약상의 주무관청과 달리 부대사업의 인허가 관청이 지자체여서 인허가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런 리스크 탓에 금융권은 부대사업 투자자금을 별도 조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행사들은 본 사업 대주단과 따로 부대사업 PF 대주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 신용이 약해 자금을 빌

리기 어려운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으로 부대사업 투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대주단도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자들의 부대사업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며 이를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대사업은 불확실성이 커 사전에 이익을 확정짓기 어렵다"면서 "최초 협상 때 부대사업 이익을 미리 예상해 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에 이익을 확정해 시설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윤 SK건설 부장도 "사전에 부대사업이익을 공제했다라도 시장 조사 이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대사업을 포기할 권한을 사업시행자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정호기자 won@

오늘부터 국가법령·지자체 조례 정보 통합 제공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법령은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별도의 지자체 사이트를 찾아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또 지자체가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제때에 바꿀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위 법령이 개정됐지만 하위 법령이 바뀌지 않아 규제 개혁의 효과가 디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완화됐지만 45개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한번에 전국 234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이 지자체별로 다른 만큼 유리한 투자 지역을 더 수월히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조달청,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 신설했지만

검수비용·폐기물 처리비 등은 못 받아

건설사 '관리비 부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서 건설사들은 자재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리비는 관급자재 운반비, 검수비, 하자 보수비, 보관·관리비 등으로 전체 관급자재 금액의 3~4% 정도가 발생한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일례로 공사비가 1000억원, 관급자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관급자재 관리비는 3억원가량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해 경비 항목에 관급자재관리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 6월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는 실제 들어가는 관급자재 관리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건설사는 공공기관이 구매한 공사용 자재가 현장에 오면 이를 검수하는데 조달청 기준에는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동시에 하자보수비용과 관급자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도 받을 수 없다.

조달청 기준은 다만 보관 및 관리비용만 인정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는 전체 관급자재 관리비의 약 9% 수준에 불과하다.

아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계자(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과소 산정해도 보전받을 길이 없다. 추후 잘못 반영한 사실이 밝혀져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조달청은 또 관급자재의 건설현장 내 소운반비용을 직접공사비로 해당공종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반영기준이 없어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에서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사후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자재 관리·보관비는 관급자재 품목 및 현장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계상이 불가능하다"며 "추후 실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PS(Provisional Sum-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항목으로 산입해 입찰공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수비용, 하자보수증권 발급 수수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및 현장 내 운반비도 PS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중소, 단순 시공업체로 퇴보 우려... 대형사도 “턴키는 제외해야”

제도 확대 추세 우려 목소리

공사용 직접구매제도 운용과 확대 추세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관에서 사주는 관급자재 확대로 매출이 줄고 자재의 단순 조립업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중소기업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

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체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사의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자재를 받아 단순 시공하는 수준으로 퇴보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재업체가 납품뿐 아니라 시공과 설치까지 맡으면서 건설사들이 영역을 빼앗기는 현상까지 빚어진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시공은 물론 자재의 구매조달, 관리까지 아우르는 능력이 경쟁력”이라며 “공사

관리 효율성 저하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인건비만 받는 전략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왔다.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일괄입찰의 문제점을 지가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사비가 확정된 턴키공사에 자재 선택 권한이 없으면 턴지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턴키에서는 종합적인 공사 높이려면 자재 구매 등 조달 중요하다.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이달 중 발주

사업비 476억 확정... 2017년 완공 영동권 최초 복합공연장 건립

강원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 중인 올림픽 아트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아트센터는 2013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 올림픽 아트센터의 기본계획과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따른 입찰안내서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치면서 476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기존 문화예술

회관의 대공연장은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부족한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노후화한 공연장을 보수할 계획이다. 철거되는 체육관에는 1000석 내외의 대공연장이 건립될 계획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올림픽 아트센터는 공연장 공간과 더불어 주민커뮤니티 공간, 주민편의시설이 도입돼 영동권 최초의 복합문화 공연장으로 건립된다. 올림픽 기간에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공연장 활용과 올림픽 이후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영동권에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올림픽 아트센터는 8월 중 일괄수주 공사에 따른 조달청 입찰안내서 심의와 사업자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자를 선정, 2017년 11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